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3호 (2023.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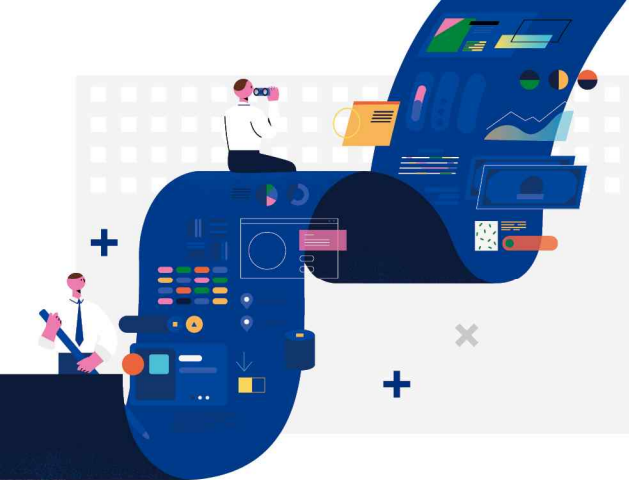
■ 이 슈

(경제) 서민주거를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정부의 지원대책 현황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3호 (2023.05.12)

Cotents

I. 이 슈

(경제) 서민주거를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정부의 지원대책 현황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5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8

III. 국내 정책동향

(교통) ‘국가철도망 계획’ 변형 및 민간 제안 허용으로 전국 철도사업 효율화 ... 9

(투자) 대학의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168억 원 지원 9

(국제) EU 탄소국경조정제 최종 승인...철강·시멘트 등 우선 적용 10

(교통)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확대 제공 10

(문화) 문체부,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 발표 11

(기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억 건 개방...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11

(경기) 4월 소비자물가 3.7% 상승...14개월 만의 3%대 12

(관광) ‘K-관광 마켓’ 10선 선정...연계 관광코스 개발 계획 12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경제 서민주거를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정부의 지원대책 현황



#주거방식 #전세 #임대차 #사기 예방 #주거정책

-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관련 이슈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및 악성 임대인으로 인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확대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2022년 시도별·주택유형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한해동안 LH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임대 보증금은 총 1,193가구, 524.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¹⁾
 - 동 자료에 따르면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약 11억 원(40가구) △2020년 약 32억 원(175가구) △2021년 약 127.7억 원(464가구) 등 매년 증가세
 - 2022년 기준 지역별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부산(316건, 13,240백 만원) △인천(136건, 9,753백 만원) △경기(189건, 8,306백 만원) △전북(92건, 4,267백 만원) △서울(137건, 4,241백 만원) 순으로, 전체 사고 금액 중 64.5%는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의 기타 주택에서 발생²⁾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업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자금 관련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건수 및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2022년 말 전체 보증사고가 5,443건, 사고 금액이 11,726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 94.5%, 102.5% 증가
 - 또한 지난 2023년 2월 말 기준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 임대인³⁾의 보증가입 물건은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218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각 42건, 충북 39건 등 지방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

[표 1] 연도별 전세자금 관련 보증사고 현황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세보증금	건수	1	27	33	372	1,630	2,408	2,799	5,443
	금액	1	34	74	792	3,442	4,682	5,790	11,726
전세대출	건수	12	31	53	203	509	886	939	1,109
	금액	16	32	77	286	752	1,257	1,214	1,485

* 자료 : HUG, 「2022 업무통계연보」 참고 및 재구성

1) 홍기원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2) 홍기원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및 강원일보 참조하여 재산출.

3)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이면서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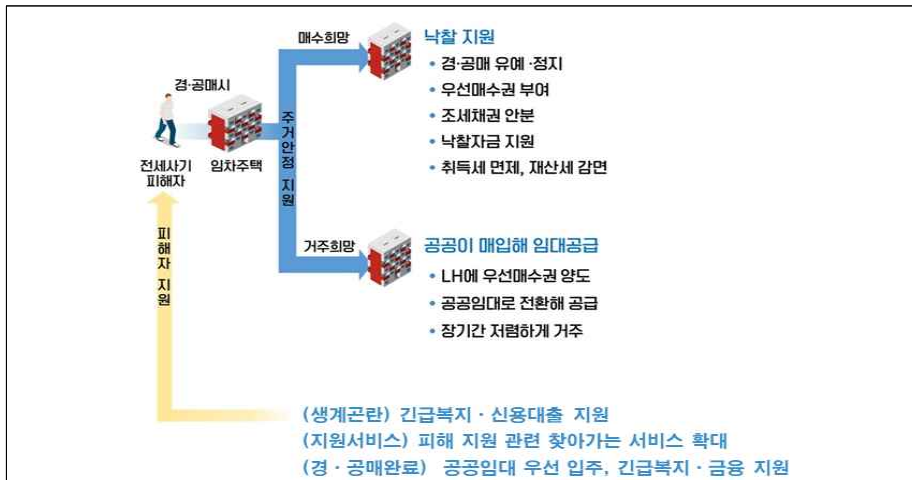
-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의미(국회입법조사처, 2023)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포털에서는 ‘전세사기’라는 용어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
 -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①강통전세 ②위법계약 ③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④임차인의 취약한 대항력 악용 등이 존재하며, 임대차 거래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전세사기 발생 가능

[표 2] 임대차 단계별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안

사기 유형	임대차 단계	주요 사례	대처방안
강통전세	임대차 주택 선정	임대차 물건의 보증금 및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80% 이상	- 전세가율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위법 계약	계약서 작성	건물 등기부등본 위조 등 임대인 사칭	등기부등본 및 임대인 신분증 인적 사항 일치 확인
		임대인의 대리인(또는 공인중개사)과 계약하는 경우	- 대리인 증명 서류 확인 - 임대인과의 통화 및 임차 조건 확인 - 등록 공인중개업자 여부 확인 및 공제증서 수령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	- 등기부등본 신탁여부 확인 - 신탁원부 확인
	계약 직후	- 다수 임차인을 상대로 한 중복계약 - 선순위 근저당, 신탁등기 말소 등 특약조건 불이행	- 강통주택 주의 -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후 잔금 지급 - 특약사항에 임대인 의무 기재 - 실행과정 확인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계약서 작성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 고지	-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 및 우선변제권 확인 - 특약사항 기재
	입주 이후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확인 - 등기부등본 가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항력 악용	계약서 작성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또는 주택담보 대출 등의 실행	- 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 - 근저당 설정 불가 등 특약사항 기재
	계약기간 이후	세입자 전출신고 요청 후 담보대출 또는 매매 실행	임대인의 단기 전출 요구 거절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 내용증명 송부 -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

* 자료 :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참고 및 재구성

-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전세사기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 ‘단속·처벌 강화’ 관련 정책을 발표
- 2022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는 △임차정보 제공 확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긴급거처 제공 △전세사기 단속 강화 △관련자 엄중 처벌 등 8가지 주제를 포함
 - 2023년 2월에는 기존의 전세사기 대책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낙찰시 무주택 유지 △대출요건 완화 및 대환대출 신설 △전세사기 관련자 전수조사 및 의심행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더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
 - 2023년 3월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선제 발급 및 유효기간 확대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전세금 우선 반환 △심리상담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 2023년 4월 27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위하여 2년간의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협의 중⁴⁾
 - 동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①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집행 ③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⑤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⑥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전세사기 수사 및 처벌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확대 및 선제적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특정경제범죄법」에서의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하며, 검찰 송치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병행될 예정



* 자료 : 국토교통부,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3.04.27)”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4) 2023년 5월 1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의원)’,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의원)’,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의의원)’의 3가지 법안이 소관위 병합심사 과정에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및 금융구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 중.

[표 3]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정책	지원 유형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09.01)	피해 예방	• (정보제공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거래환경 조성)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 마련, 고전세가를 지역 관리 • (법적권리 강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지원) 저리 긴급 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거처 제공) HUG 관리주택 임시거처 제공
	단속·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2.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2023.02.02)	피해 예방	•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업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23.01~) •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를 100%→90% •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피해 지원	• (원스톱 법률서비스)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원), 면적 85m² 이하('23.05) • (대출요건 완화 및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 지원('23.03), 대환대출 상품 신설('23.05) •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23 상반기)
	단속·처벌 강화	•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매도 등(~'23.05) • (불법 광고·중개 퇴출) 2023년 상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의심자 전수조사('23.02~), 관련법령 개정 추진('23.06)
3.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2023.03.10)	피해 지원	•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조건부 선제 발급 및 유효기간 확대(6개월) •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월세 선납 제외, 입주 가능 주택면적 확대, 최대거주기간 확대 • (대출지원 대상확대) 보증부 월세 이전, 거주주택 낙찰 등 • (전세금 우선 반환)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배분('23.04) • (심리상담 지원) 필요시 1인 3회 한도 방문상담 진행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2023.04.27)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중앙정부 정책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인천시는 2022년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부 및 유관기관 등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⁵⁾
 - 지난 2023년 1월 말 부평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⁶⁾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접수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긴급금융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월세 계약에 따른 시기별 확인 사항 및 유의사항 △안심전세 앱(App)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30일부터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
 - 4월 19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둔 추가 지원책인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

[표 4]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

구분		주요 내용
금융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약 3,000세대 •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 • (지원범위) 전세 피해자용 전세자금대출의 연 1.2~2.1% 이자 2년간 전액 지원 • (사 업 비) 60억 원
	피해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 청년 약 180명 • (지원범위) 월 40만원 한도 12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480만원) • (사 업 비) 8억 6천만 원(시비)
	피해자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 약 500세대 • (지원범위) 가구당 이사비 150만 원 • (사 업 비) 7억 5천만 원(시비)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범위)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 (지원내용) 5년간 보증료율 0.8%로 융자 지원,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 보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법률지원 확대		• 경·공매 전문 전문법률상담사 추가 지원(5월) •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 지원범위 확대 건의
심리상담 지원		• 자살예방 프로그램 추가 운영(5월 중)
단전·단수 유예		• 단수 즉시 유예 조치(상수도사업본부) • 한전에 단전 유예 협조 요청
피해예방 지원		•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 실시 • 민간 임대사업자 점검 완료(922건 중 위반사례 350건 조사 중) •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104개소) 특별점검(5월)

* 자료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 참고 및 재구성

- 5) 피해 방지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이내에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
- 6) 2023년 3월 13일 정식으로 개소하였으며, 2023년 4월 17일 기준 832명을 대상으로 △법률 641건 △금융 477건 △주거지원 299건 △기타 848건 등 총 2,265건의 방문상담 진행.

제조 >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 2023년 3월 국내 기계장비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2.1%, 전월 대비 34.0% 증가한 71,663억 원을 수주하며, 지난 겨울동안 전월 대비 부진했던 경기가 일부 회복
 -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환경의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둔화하며 국내 수주액은 34,139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한 반면, 해외 수주액은 31,99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며 기계장비산업 총수주액 회복을 견인
 - 기계장비산업에서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기계장비 관련 국내 및 해외 수요의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
 - 국내 수요는 지난 6개월 평균 전월 대비 5.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하였으나, 해외 수요는 지난 6개월 평균 전월 대비 4.4%,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

[표 1]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요자별 수주액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2.08	'22.09	'22.10	'22.11	'22.12	'23.01	'23.02	'23.03
총수주액 (증감률)	63,973 (29.7)	58,614 (15.3)	56,008 (13.7)	58,955 (19.1)	54,884 (-25.6)	54,852 (0.5)	53,478 (2.8)	71,663 (2.1)
국내 (증감률)	33,111 (35.8)	27,277 (9.1)	24,037 (-6.4)	28,551 (20.0)	25,245 (-33.9)	25,536 (-4.4)	23,581 (-6.5)	34,139 (-6.2)
대리점 (증감률)	4,883 (7.9)	5,758 (50.8)	4,552 (9.0)	4,706 (1.3)	4,121 (-7.3)	5,095 (7.1)	4,644 (-4.5)	5,526 (-8.1)
해외 (증감률)	25,978 (27.4)	25,579 (16.3)	27,420 (41.5)	25,699 (21.9)	25,517 (-18.0)	24,221 (4.9)	25,253 (15.1)	31,999 (15.2)

* 자료 : 통계청, '기계주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국) 2023년 3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5.2% 상승하였으며, 기계장비 수출은 대체로 약보합세
 - (생산지수) 전국 기계장치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3.7%,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117.5로 집계
 - 지난 1~2월의 생산이 감소했던 기저효과로 인하여 생산지수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실질 생산지수의 증감률은 약 3.1% 수준

7) 2023년 2월 발표한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산업 2022년 성과와 2023년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기계산업이 △수주액 및 PMI 지수하락 △재고순환지수 중립-회복국면 돌입 △수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생산, 수출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품목별 수출액)** 2023년 3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 수출액은 전월 대비 9.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505.3억 원 수준⁸⁾
 - 국내 기계장비 수출액은 품목에 관계없이 전월 대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실제 성장 규모는 품목별 차이가 존재
 - 기초산업기계 및 정밀기계 수출액은 전월 대비 각각 4.7%, 20.4% 증가하여 수출 규모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7.4%, 14.3% 감소한 149.0억 달러 및 87.4억 달러로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 산업기계와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부문의 수출액은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하여 각각 184.9억 원, 84.0억 원 수준을 달성

○ **(인천)** 인천지역의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136.3으로 전국지수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장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한 약 54.9억 달러 수준

- **(생산지수)** 기계장비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5.4%, 전월 대비 16.3% 증가하며, 지난 2월 대비 개선
- **(품목별 수출액)** 인천의 기계장비 품목별 수출액은 전국 추이와 다르게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부문에서 감소
 -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8%, 28.1%, 4.1%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역시 최소 10% 이상 증가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부문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3.0% 감소한 8.3억 달러를 기록

[표 2] 국내 기계장치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2.12	'23.01	'23.02 (p)	'23.03 (p)	'22.03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기계장치 제조업	135.1	95.2	103.3	117.5	111.7	13.7	5.2
인천	기계장치 제조업	150.5	105.1	117.2	136.3	108.7	16.3	25.4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8) 이하의 기계장비 수출액은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의 수출액 합산값을 의미.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기계장비 품목별 수출 동향(2023.03)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03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01.9	-26.3	103.3	-19.0	158.1	30.0	115.4	-21.4	107.3	-25.1	144.1	12.3
자동차	142.3	26.8	139.6	29.3	112.7	23.0	152.2	38.7	149.1	45.2	174.7	145.4
기계장비	117.5	5.2	116.1	1.5	160.1	31.0	136.3	25.4	139.3	22.7	226.3	150.1
바이오-의약	134.4	14.5	126.2	4.6	-	-	133.7	20.8	109.9	23.2	-	-
바이오-화장품	94.2	-19.5	96.7	-13.8	107.5	-2.4	113.2	0.7	104.0	1.7	108.1	22.6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17,243	-45.7	87,745	-45.3	539	-75.7	1,578	-65.5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통

『국가철도망 계획』 변형 및 민간 제안 허용으로 전국 철도사업 효율화



#국토교통부

- 지난 4월 24일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어 철도사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민간이 신규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허용할 계획
 -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에 대한 민간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를 제출토록 하며,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중형·경량 전철에 대해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방침
 - 이에 더해 향후 사업에는 △철도역·역세권 합동 개발 및 개발이익 재투자 △민간사업자의 부속사업 다양화 △비혼잡시간대 소형화물칸 운영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여, 국민의 요금 부담 및 지자체의 역 신설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투자

대학의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168억 원 지원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이하 브릿지) 3.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의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신규 대학 선정을 공고
 - ‘브릿지’는 대학이 가진 우수성과를 발굴해 기업이 원하는 기술 수준까지 고도화하고 기술이전 또는 기술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사업으로, 도입 7년 만에 전체 참여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가 2배 이상 증가
 -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가·지역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대학의 우수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16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술거점형 및 지역거점형 총 24개 신규 참여대학 선정을 추진
 - 기술거점형은 일반대 16개교에 각 6억 6천만 원씩 지원해 국가전략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중대형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지역거점형은 일반대 8개교에 각 7억 7천만 원씩 지원해 지역 내 타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
 - 참여 희망 대학은 5월 26일까지 각 대학에 적합한 1개의 사업유형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또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국제 > EU 탄소국경조정제 최종 승인...철강·시멘트 등 우선 적용



#European Commission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EU)은 지난 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할 예정
 - ‘CBAM’이란 EU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제출하는 제도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EU)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도입하는 무역관세의 일종
 - CBAM의 대상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수소 제품의 경우 직접 탄소배출량만, 시멘트·전력·비료는 직·간접적 탄소배출량이 모두 포함되며,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및 인증기관,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예정
 -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지불된 탄소가격을 고려해 감면할 계획으로, 수출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으며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

교통 >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확대 제공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4월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무상 제공 시작
 -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해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를 의미
 - 동 자료는 자율주행뿐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과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해 판단하는 전자 제어 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에 활용 가능
 - 정부는 2019년 고속도로 5,585km, 2022년 일반국도 16,820km의 정밀도로지도를 완성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무료 공개·제공 시작
 - 또한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맞춰 2023년은 특별광역시도 및 지방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추진 중
 - 수도권의 4차로 이상 특별광역시도 및 지방도 구축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제작한다는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의 디지털 전략계획을 뒷받침하고, K-컬처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8일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를 확정·발표
- 문체부는 이번 1차 기본계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 문화 등 3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현재 5,400억 원인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2025년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
- 동 계획에 따른 9가지 중점과제의 성과 목표와 연도별 달성 목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중점과제	성과 목표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1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산업 육성	디지털 인재 양성 (3년간 6.6만명)	2.1만 명	2.2만 명	2.3만 명
2	창작·제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 자원 개방	문화 자원 개방	5만 건	10만 건	15만 건
		AI 학습데이터(한국어 말뭉치)	25종	50종	130종('27)
3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확대	R&D 예산	1,354억	3,076억	4,615억
4	디지털 문화향유 플랫폼 다변화	디지털 향유 경험 제고	75.5% (기초예측 5%)	80.0% (기초예측 6.5%)	85.0% (기초예측 8%)
5	문화시설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국내 관광 향유 (장애친화형)	1천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
6	소통·이동 제약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문화해설로봇 서비스	22만 건 (23대)	32만 건 (50대)	50만 건 (80대, 누적)
7	디지털 적극행정과 안전 문화 조성	사이버위협 대응 자동화(SOAR) 확대	10%	15%	25%
8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	지능형 업무환경 만족도	70점	72점	75점
9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구축	직원 디지털 역량 수준 제고	57점	64점	70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셋 310종을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전문영역부터 일상생활까지 쏠분야에 걸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능화 서비스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핵심 데이터 인프라 사업으로, 올해는 한국어, 이미지·영상, 헬스케어 등 기존 산업분야에 제조·로보틱스·교육·금융·스포츠를 포함한 14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
- 대규모 데이터 개방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3개월 이른 초기 개방 시점부터 매달 약 80여 종 내외를 개방하여 7월 말까지 전체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예정
- 전체 데이터 개방이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AI허브'를 통해 총 691종, 약 26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 가능

경기 > 4월 소비자물가 3.7% 상승...14개월 만의 3%대

+

#통계청·기획재정부

- 통계청 발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
 - 이는 전월 상승률(4.2%)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2022년 2월(3.7%) 이후 최초
 -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7% 상승하였으며, 장기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 역시 전년 대비 4.6% 상승하여 13개월 연속 4%대를 웃돌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
 - 2023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성질별 등락률

(2020=100)	품목수	지수	등락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지수	458	110.80	0.2	3.7
상품	310	112.90	0.0	3.4
농축수산물	78	111.53	-1.4	1.0
공업제품	228	111.56	0.3	2.0
전기·가스·수도	4	129.76	0.0	23.7
서비스	148	108.96	0.5	4.0
집세	2	103.82	0.0	0.8
공공서비스	30	102.66	0.0	1.0
개인서비스	116	113.20	0.8	6.1

관광 > 'K-관광 마켓' 10선 선정...연계 관광코스 개발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릴 'K-관광 마켓' 10선을 선정하여 지난 3일 발표
 - 'K-관광 마켓'은 각 시장이 가진 고유의 매력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 경제 견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 △서울풍물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광주 양동전통시장 △수원 남문로데오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단양 구경시장 △순천 옷장 △안동 구시장연합 △진주 중앙·논개시장 등이 선정
 - 문체부는 전통시장의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발굴하고 연계 관광지와 결합하고, △시장별 홍보대사 임명 △월별 전통시장 릴레이 행사 △해외 박람회 참가 △TV 프로그램 제작 등을 병행하여 'K-관광 마켓'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

참고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 업무통계연보」, 2023.04.20.
-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세금 미반환 사고 ‘공포’ NH까지 덮쳐’ 작년 한 해만 524억…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2023.04.21.
- 강원일보, “도내 전세임대주택도 보증금 못돌려받은 사고 급증…악성임대인 물건도 17건 확인돼”, 2023.04.24.
- 이데일리,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역전세 공포”, 2023.05.01.
- 국회입법조사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 이슈와 논점, 제2047호, 2023.01.31.
-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2022.09.0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 국토교통부, 2023.03.10.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2023.04.27.
- 인천광역시, “인천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위해 전문가 무료 상담 개시”, 2023.03.28.
- 인천광역시,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해 아픔 보듬는다”, 2023.04.19.
- 국가통계포털(KOSIS), “기계수주동향조사”.
- 국가통계포털(KOSIS), “공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꼭 막힌 ‘철도사업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2023.04.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받을 대학 24곳 선정한다”, 교육부, 2023.04.24.
-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U탄소국경조정제 최종 승인…철강·시멘트 6종 우선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2023.04.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일반 국도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2023.04.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 디지털 전략 첫 수립…“2025년까지 1조원 투자””, 문화체육관광부, 2023.04.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억 건 개방…역대 최대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5.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월 소비자물가 3.7%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 통계청·기획재정부, 2023.05.02.
- 통계청,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05.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관광 마켓’ 10선 선정…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05.03.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3호(2023.05.12)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5월 12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